■ 국정감사 내일 마감 … 주목 받은 광주·전남 의원들

이낙연 의원 택시기사 애환 담은 '르포' 화제

주승용 의원, 영상자료 활용 '현장 국감' 호평
양형일 의원, 부드러운 질의 속 날카로운 지적
최인기 의원, 정책 자료집 발간 '전문성' 뽐내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양형일 의원〉

〈최인기 의원〉

지난 9월 31일 시작된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한달여의 장정 끝에 2일 막을 내린다. 올해 국감은 '북한 핵 실험'과 '정계개편 논란' 등에 휩쓸려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심도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연이어 발간하는가 하면 현장을 철저히 검증한 국정감사로 주목을 받았다.

우선 신문기자 출신으로 '르포 국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바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은 올해도 택시기사들의 애환을 담은 르포 형식의 자료집 '택시운전사'를 발행해 눈길을 끌었다. 3개월의 시간을 투입해 만든 이번 르포 자료집에는 경기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들의 애환을 절절하게 담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4개 원전 인근 지역 현황', 2004년 'KTX를 타보니', 2005년 '수도권 임대주택 실태보고' 등 현장을 발로 뛴 르포 형식의 자료집을 낸 바 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도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를 국정감사장에서 활용, 주목을 받았다. 주 의원은 또한, 공공임대주택 18개 단지 전체를 실사해서 부대 복리시설의 부실함을 고발하는가 하면 시화호 퇴적토 중금속 오염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으로 호평을 받았다.

같은 당의 양형일 의원(광주 동)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자료집을 만들어 경찰관의 총기 사용 허와 실을 진단한 것은 물론, 복무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호평을 받았다. 양 의원은 또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국감 현장에서 부드러운 질의 속에 서릿발 같은 지적을 담아 피감기관으로부터 '외유내강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자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에 맞게 수준 높은 정책 자료집을 2권이나 발간, 전문성을 뽐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외국의 지방세 부과와 징수 정책을 분석한 '지방자치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와 외국의 지방세 제도'라는 논문에 버금가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또한 함께 발간한 '지역 정보화 전략' 자료집은 아직까지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활성화 및 민원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침서라는 평가를 받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수도 훼손 우려" 강박원(맨 왼쪽) 광주시의회 의장이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광주시의회의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반대에 따른 광주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북도의회·경주시의회 의원 7명 결의문 관련 광주시의회 항의 방문

"상생의 길 찾아야"

광주시의회의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문과 관련, 〈본보 지난달 31일자 2면〉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경북도의회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 4명과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 등 경주시의회 의원 3명은 이날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을 만나 "광주시의회의 경주역사도시 특별법 반대 결의는 지역간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불씨를 될 수 있는 만큼 경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경주의 특별법은 첨성대 등 문화자원을 복원하는 의미가 커 광주의 문화수도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면서 "경주 특별법이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는 만큼 오는 13일 경북도의회 개회에 앞서 도의회 의장과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정무웅 도의원도 "광주시의회의 결의안을 철회할 수는 없지만 광주시의회가 경주의 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감정이 격해 있는)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도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을 폄하하거나 정략적으로 반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특별법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질 경우 참여정부가 제시한 광주의 문화수도가 훼손되지 않느냐는 지역민들의 우려감을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구로서 시의회가 대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갈등이 확대되선 안되며 경북도의회 의장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상호간에 오해가 없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국인 드레이크에 명예시민증 수여"

광주시의회 동의안 통과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전쟁고아에 대한 애정을 전파해 온 미국인 조지 에프 드레이크(George F. Drake)에 대한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명예시민이 된 드레이크씨는 지난 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동안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고국에 1천통 이상의 지원 요청 편지를 보낸 결과, 400여개 고아원의 5만4천여명의 원생들에게 2백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도록 했다. 드레이크씨는 또 지난해 5월 라스베거스에서 한국전쟁 고아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고 1천500여 페이지 이상의 사진과 자료를 실은 한국전쟁 고아들에 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이날 광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광주시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김치센터 인수' 시급한가

김주정
사회1부 차장

광주시가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남구의 '김치종합센터'인수 문제다.

남구청이 추진하려다 힘에 부쳐 허덕이는 김치종합센터를 시가 대신 인수해 추진하려니 명분이나 예산이 마땅치 않고, 모른 체하자니 자치구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부담을 떨칠 수 없을 것 같아서다.

남구청이 지난 2002년부터 효천역 인근 임암동 일대 2만4천여 평에 건립 중인 김치종합센터는 현재 건축비 100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공사기한인 올 연말을 넘기게 됐다. 연간 10억원의 운영비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남구청은 앞서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황일봉 구청장 명의로 광주시에 김치센터를 인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보다 못한 박광태 시장도 '민선 4기 역점시책 보고회'에서 "명의는 남구로 하되 운영은 시가 맡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광주시는 중앙부처에 사업비 추가지원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광주시의 김치종합센터 인수는 두 가지 대목에서 시민들로부터 걱정을 사고 있다.

첫째는 자치구의 방만한 사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치센터는 당초 196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구청이 건축 규모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확장한데다 사업부지도 당초 그린벨트 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꾸면서 건축비가 100억원이나 늘었다. 더욱이 추가한 4층에는 필수시설도 아닌 숙박시설을 들이도록 임의로 설계변경하고는 운영계획 한 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광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무계획·예산낭비· 책임회피 등 부실사업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셈이다.

자치구 파산(破産)의 전조(前兆)가 아닌가 걱정될 정도다. 이런 이유로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퍼지고 있다.

둘째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다른 시급한 사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연간 가용예산은 1천억원 정도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400억원을 전국체전 준비에 쏟아부어야 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하철 운영적자·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재정보전 등 각각 200억여원을 보태야 한다. 박광태 시장 공약 1호인 '13만4천 개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 써야 한다. 김치센터 인수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인지 우선 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책임 못질 사업을 벌여만 놓으면 뒤치닥 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하는 나쁜 관례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

/jjnews@kwangju.co.kr